



미주·유럽지역 종돈수입 금지조치 해제

- 9월 1일부터, PRRS 비발생농장에서 수입할 경우

농림수산부는 지난 '9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해 오던 PRRS(돼지 생식 및 호흡기 증후군) 발생국가로부터의 종돈수입 금지조치를 9월 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2년전 새로운 돼지 전염병인 PRRS의 국내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PRRS의 발생국들로부터의 종돈수입 금지를 본회 등 축산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하여 업계 자율형식으로 미국, 덴마크, 영국 등 PRRS 발생국으로부터의 종돈수입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농림수산부는 수입금지 기간중 국내에서 PRRS가 이미 발생하는데 그동안 지연되어 온 PRRS 진단방법 개발이 완료돼 검역소에서 자체적으로 PRRS 양성돈을 적발해 낼 수 있게 됨에 따라 종돈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게 된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이번 조치로 PRRS 발생국에서 종돈을 수입해 올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발급하는 검역증명서에 종돈 수출전 8주간 수출 돼지의 생산 및 사육농장내에서 식용돼지의 유산 또는 조산과 어린돼지의 쇠약, 폐사가 정상 수준 이상으로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명기하도록 했다. 또한 수출국 정부 수의당국에서 혈청학적 검사(간접 면역형광항체법 또는 면역페록시데이스 탐식세포검정법)에 의한 검사 결과 PRRS가 확인된 사례가 없었다는 사실과 수출돼지에 대한 개별 혈청검사 결과 음성이란 내용을 검역증명서에 명기해야만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농림수산부는 PRRS 비발생국의 경우엔 한

국으로의 돼지 수출전 2년간 수출국내에서 번식용 돼지의 유산 또는 조산과 어린 돼지의 쇠약, 폐사가 정상 수준 이상으로 발견되지 않았거나 혈청학적 검사결과 PRRS로 확인된 사례가 없었다는 사실이 검역증명서에 명기될 경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지금까지 PRRS 발생으로 수입이 중지되었던 나라는 미국, 캐나다,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 주요 종돈 수출국 대부분이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난 2년간 주로 아일랜드와 호주에서 종돈을 수입해 왔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그동안 고능력돈의 확보에 애로를 겪었던 종돈장들이 이들 나라로부터의 종돈 수입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이며 종돈 수입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91년도 김포에 소재한 농장에서 채취한 혈청검사결과 116두중 9두가 양성 반응을 보여 최초로 PRRS 발생이 확인된 이후(검사는 '92년에 시행) 지금까지 검사두수 1,677두중 123두에서 항체 양성물을 나타냈다.

수출돼지고기 규격불량률 54.4%

- 원료돈 불량률 전체의 49%

돼지고기 수출에 있어서 규격불량률이 54.4%에 달하는 등 수출부위 생산수율이 표준수율에 훨씬 못미쳐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생체 110kg의 돼지를 도축할 경우 등심은 7.6kg, 안심 0.9kg, 어깨등심 3.8kg, 햄육(뒷다리)13.8kg, 합계 26.1kg이 표준 수출부위 생산수율이나, 현재 수출원료돈을 납품받아 도축, 가공, 냉장, 냉동후 수출하기까지 실제 생산되는 수출부위 생산량은 등심3.8kg, 안심0.8kg, 어깨등심2.7kg, 햄육4.6kg 등 11.9kg에 불과해 불량률이 5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부분육 생산수율 불합격 요인은 생체 증량(100kg)미달, 약물잔류, 미거세돈, 몰돼지, PSE돈으로 인한 원료돈 불량률이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축불량으로 인한 혈반점지육, PSE육, 이분체 절단불량, 예냉불량이 26%에 달하고 있다. 또한 가공불량에 따른 칼흠집, 정형불량, 급냉정 처리육 체류, 온도관리 불량에 따른 드립(Drip)발생이 9%, 급냉 및 보관불량, 이동시 외부 방치에 따른 불량률이 16%이다.

따라서 돼지고기 수출에 따른 표준수율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성장단계에 맞는 사료를 급여해 출하체중을 110kg이상으로 높이고, 도축 및 정형, 발골작업종사자들의 의식개선과 시설보완이 시급하다.

보사부, 농산물 농약 잔류기준 완화 방침

보사부는 농산물의 일부 잔류 농약기준이 선진국 등 국제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불필요한 자원낭비 등 피해가 크다는 농산물 수입업체 등의 지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방침이다.

8월 25일 보사부에 따르면, 수확 후 살충제로 뿌리는 말라티온의 경우 국내 잔류기준이 2ppm으로 미국·프랑스·독일·일본 등의 8ppm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5월 대성제분 등 3개사가 식품용으로 수입한 미국산 밀 1천5백톤이 국제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3ppm의 말라티온이 검출됐으나 국내기준을 초과해 사료로 전환되는 등 업계의 이의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현재 56개 농산물을 대상으로 책정돼 있는 38종의 농약 잔류기준을 국제치와 비교해 차이가 큰 4~5종에 대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소비자단체 및 농업관련 단체로부터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축산물등급판정소 개설

- 등급업무 9월말까지 축협에 이관

한국축육개량협회는 8월 20일 육류등급부를 축산물 등급판정소로 기구를 확대 개편하고, 육류등급업무를 9월말까지 축협중앙회에 이관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에 앞서 축산물등급판정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와 등급제 조기 정착을 위해 축협중앙회에 독립된 기구로 「축산물 등급판정소」를 신설토록 하고, 조직을 2부(관리·업무부), 5과(총무·기획·지도·도매시장·지방과)를 두되, 소장은 축협중앙회 이사급으로 한다는 조직안을 마련했었다.

축산물 등급 판정업무는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축산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적인 뒷받침하에 본격 실시하게 되었다.

한편 신설된 축산물등급판정소에는 박태진 전국립종축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곡물가·수송비 계속 상승

- 옥수수 22%, 대두 13%, 생산량 감소

옥수수와 대두 등 곡물 수송선의 운송비가 급상승하고 있다. 6월말부터 미국을 강타한 대홍수의 영향으로 두절되었던 곡물수송의 대동맥인 미국 미시시피강의 물류기능이 부분적으로 회복되어 멕시코만 걸프로의 집하가 호전되면서 지금까지 선박배정을 연기했던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선박배정을 했기 때문이다.

오늘 10월부터는 곡물의 수확기가 본격화되므로 선

주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측면도 있어 곡물수송비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미국중서부의 집중호우로 미시시피강과 미주리강의 합류점이 서쪽으로 2km나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고 주변의 토지를 모두 삼키면서 직경 20km규모의 거대한 호수를 형성하고 있다.

6월 중순부터 시작된 미국 중서부의 장마로 인한 대홍수는 8월에 접어들어서도 계속 피해지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물이 빠질려면 약 2개월은 더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에따라 미농무성이 8월 11일 발표한 '93/'94년도 미국산 주요곡물의 수급전망에 따르면, 곡창지대 중심부를 강타한 홍수로 인해 올 가을부터 내년 봄에 수확하는 옥수수, 대두, 밀의 생산, 기말재고가 모두 떨어졌다.

특히 타격이 컸던 옥수수의 예상 생산량은 전년도보다 22% 정도 줄어든 74억2천3백부셀로 나타났고, 대두도 13% 줄어든 19억2백만부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시카고 곡물 선물시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곡물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검정소 지제불량돈 전체의 9.5%

상반기중 제2검정소에서 검정을 받은 종돈중 9.5%가 지제불량으로 검정에서 불합격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 제2검정소가 상반기 검정자료를 집계한 결과, 이 기간중 검정돈 입식두수는 902두였고 884두가 검정을 마쳤는데, 이중 75.5%인 667두가 검정에 합격되고, 24.5%인 217두는 불합격됐다.

불합격돈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지제불량이 84두로 전체 불합격돈의 38.7%로 최다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선발지수 미달이 21.7%인 47두, 반점은 9.7%인 21두, 귀이상이 8.8%인 19두, 생식기불량이 2.3%인 5두, 요루가 0.5%인 1두, 기타가 18.4%인 40두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2검정소 지제불량률은 제1검정소의 68%에 비해서는 29%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성적은 높으면서도 지제불량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는 종돈이 많은 것은 최근 몇년간 지제가 약한 유럽계통의 종돈이 많이 수입되었고, 능력이 높을 수록 단기간에 급성장을 해 지제가 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제2검정소에서는 상반기중 598두가 경매에 상장돼 96.3%인 576두가 낙찰되었고, 평균 낙찰가격은 597,484원이었다.

검정성적은 평균 일당증체량이 934g(암 890g, 수 952g), 사료요구율 2.40(암 2.48, 수 2.37)등지방두께 1.52cm(암 1.56cm, 수 1.51cm), 90kg 도달일령 136일(암 138일, 수135일), 검정기간 65일(암68일, 수63일), 선발지수 214(암 205, 수 217)를 기록했다.

일본 돼지고기 수입량 전년비 8.7% 감소

— 경기 불황과 수입쇠고기 가격 하락 영향으로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대장성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7월말까지 68,409톤의 냉장육과 190,331톤의 냉동육 등 총 258,740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8.7%나 감소한 양이다.

이 기간중 냉동육은 지난해보다 14.6%나 감소한 반면, 냉장육은 오히려 12.8%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이 기간중 일본에 가장 많은 돼지고기를 수출한 나라는 대만으로 냉장육 44,058톤, 냉동육 68,231톤, 합계 112,289톤을 수출해 43.4%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서는 13.5%나 수출량이 줄어들었다.

그 다음은 덴마크로 80,193톤의 냉동육만 수출하여

31.0%의 시장점유율을 보였으나, 역시 지난해에 비해서는 8.8%나 수출량이 줄었다. 3위는 미국으로 냉장육 22,320톤과 냉동육 16,712톤, 합계 39,032톤을 수출하여 15.1%의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대만과 덴마크가 수출량 감소를 보인 반면, 미국은 냉장육이 30.3%나 증가한데 힘입어 3.0%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7월까지 냉장육 830톤, 냉동육 5,877톤, 합계 6,707톤을 수출하여 2.6%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수출량은 지난해에 비해 75%, 수출금액은 3천6백5만1천달러(약 2백88억4천만원)으로 86% 각각 늘어났다.

이처럼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량이 감소한 원인은 경기 불황과 기후불순에 따른 수요감소와 엔고환원에 따른 수입쇠고기의 저가 세일로 돼지고기 소비가 수입쇠고기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정부, 수입 농림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 수입돼지고기는 부위 표시판에 원산지 표시해야

11월부터 돼지고기와 쇠고기는 물론, 수입농림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수산부는 9월 3일 우리나라의 농림수산물 수입 자유화 확대에 비위생적이고 저가 농림수산물의 수입 증가에 따라 소비자가 수입품과 국산품을 식별하기가 어렵고, 수입농림수산물이 국산품으로 위장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농림수산물의 국내 유통단계 원산지 표시요령(안)”을 제정,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농림수산부가 고시한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위별 정형 및 표시방법(농림수산부고시 제 90-50호)”에 의해 부위 표시판을 제작하여 수입돼지고기와 수입쇠고기를 판매하는 경우 가로 11cm이상, 세로 11cm 이상의 부위 표시판에 부위명, 용도, 100g당

가격, 원산지(30cm이상, 글자크기 50포인트 이상)를 의무적으로 표시한 후 판매해야 한다.

또한 수입이 통과된후 포장을 뜯어 재포장하여 국내에 유통시키는 고사리, 참깨 등의 경우 포장지 크기가 30×20cm이상이면 엄지손톱보다 큰 38포인트 이상의 한글 활자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표시위치는 포장전면 좌측상단, 색깔은 바탕색과 구분할 수 있는 단색을 쓰도록 했다.

정부가 고시한 대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돼지고기 등을 판매할 경우 수입업자나 유통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린벨트내 축사 300평까지 증축 허용

건설부는 지난 8월 31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현지 주민의 편익증대를 위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정비방안을 제시했다.

건설부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현재 그린벨트내에 90평까지 건축할 수 있는 축사를 300평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는데, 악취·폐수 등 환경 훼손이 있는 점을 감안, 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때만 폐수처리 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어가의 주택 부속사와 영농 작업장을 각각 30평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용 창고도 현재 경지 등 토지면적의 0.5% 이내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경지면적에 따라 필요한 만큼 설치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

“UR협상 12월 15일까지 타결”

— GATT 내년 4월 최종서명 목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백16개 회원국 무역대표들은 지난 8월 31일 제네바에서 열린 전체회의 첫날회의에서 UR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 시한을

오는 12월 15일자로 못박았다고 GATT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1백16개 회원국 무역 대표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는 12월 15일까지 UR협상을 일괄 타결짓고, 내년 4월 회원국 각료회의를 열어 이를 조인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UR 각 분야별 협상일정과 협상방향을 확정하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서덜랜드 사무총장은 오는 12월 15일까지 협상종료, 내년 4월 최종서명 일정을 재확인하고, 일정대로 협상이 종결될 수 있도록 각국이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프랑스는 미국과 유럽공동체(EC)의 농산물 보조금 삭감 협정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EC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방지 강화

— 정부, 각 시·도에 지시

항생제, 향미제 등 동물약품의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 방지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이에 대한 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정부는 지난 8월 31일 시·도 가축위생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경제발전으로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른 육류 소비의 증가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유해잔류물질 검사업무를 제고하는 한편 가축을 사육단계에서부터 유해물질 잔류요인을 효율적으로 차단하여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 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양축농가에 대한 잔류물질방지를 위해 지도·홍보를 강화하기로 하고 출하전 일정기간부터 비육후기사료를 급여토록 계도하는 한편 항생제 등 동물약품 투여시 휴약기간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또한 질병치료시 수의사와 상의하고 10가지 동물약품 안전사용수칙을 준수하여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하지말도록 농가를 지도키로 했다.

도살·해체수수료 자율화

「농림수산부는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축산물작업장(도축장, 도계장등)에서 징수하는 수축의 도살·해체수수료(작업장시설사용경비·소요인건비·내당처리비·육류냉각비 등)에 대한 도지사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자율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령은, 현행 “도살·해체수수료를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도살·해체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축산물 작업장은 도지사의 승인없이 자체적으로 도살·해체 수수료를 결정,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법개정으로 도축수수료가 올라 양축농가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세계 '93/94 옥수수생산, 전년대비 10.6% 감소

— 생산, 공급, 기말재고는 2년전과 비슷

그동안 많은 우려를 했던 '93/94 세계 옥수수 수급상황이 예상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농무성(USDA)이 발표한 9월분 세계 곡물수급 전망에 따르면, '93/94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미국 중서부의 흉수피해로 지난해보다 10.6% 감소한 4억7천 420만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따라 '93/94년도 소비물량을 충족시키고 나면 '94년 9월 30일 기말재고는 금년 9월 30일 재고보다는 27.3%나 대폭 감소한 7천520만톤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의 옥수수 생산은 사상 최대의 풍작이었음을 감안, 2년전인 '91/92년도와 비교해 보면 '93/94년도의 세계 옥수수 생산, 총공급, 기말재고 수준은 예년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